

농업 정책 패러다임, 대전환 필요

단 상



강갑순
서산시북지대단 이사장

기후변화는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서산시는 지난 7월 집중호우 당시 시간당 110mm를 폭탄이 쏟아져 침수로 인한 인명 사고까지 발생해 사상 초유의 사태를 빚었다.

논과 밭 침수로 1년 농사를 망친 농민들의 근심은 땅 꺼지고 있다. 도로 및 하천 등도 유실돼 생황 불편까지 초래했다. 다행히도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긴급 보수와 주민 피해 최소화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땀집 치방에 그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필요한 게 농업정책에 대한 과감한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해를 거듭하면서 우리나라는 여름철 극심한 집중호우와 극한 강수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라고 진단한다. 그렇다면 이를 피해 갈 수도 없다.

농작물의 침수와 토양유실, 병충해 확산은 농민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 나아가 국가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극한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정책의 전환과 강화가 절실한 때다.

해 이런 피해가 발생하고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 해법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기후 변화에 강한 인프라를 구축하면 가능하다는 것. 국제적 사례를 통해 입증됐다. 네덜란드 농업에서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믿는 생강한다. 네덜란드는 바다보다 땅이 낮다. 육과 수로를 구축하고 풍차 등을 이용해 물 관리를 하며 도시 번영을 이룩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극한 호우를 감당할 배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배수 체계는 물길을 만든 관을 매설하는 방식이 고작이다. 여기에다 스마트 배수시설 도입이 필요하다. 면적대비 시간당 쏟아지는 빗물을 계산해 이를 감당할 배수시설이 구축돼야 한다. 또 저지대 농지에는 배수펌프 설치와 저류지 조성은 침수 피해를 막는 최후의 시선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부를 빼고는 대부분이 이런 시설은 갖추질 못한 실정이다.

또 기상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농업기술 보급과 교육이 필요하다. 스마트 관기술과 정밀농업, 기상 데이터를 활용한 예측 가능한 전략적 농업은 기후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농업으로의 발전을 견인하게 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농작물 보험제도의 확대 및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필자도 같은 생각이다. 현행 재해보험은 특정 작물에만 적용되거나 보장되는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집중호우 등으로 뿌리 손상으로 생육이 저하되거나 부패 등의 피해까지 보장되는 방향으로 보장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 국가와 지방정부, 지자체의 부담 확장이 더해지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필자는 주장한다.

또 지역의 특질적인 기후에 적합한 품종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논산 딸기, 부여 토마토 농작물은 대단위 규모로 지자체를 대표한다. 지역마다 특색 있는 농작물을 재배를 통한 농가의 소득증대를 꾀해나가야 한다. 서산에는 특색 있는 농작물이 많지 않다. 읍면 단락, 고복 알타리 무, 인지, 부석의 6쪽마늘 배근 특색 있는 농작물은 손에 꼽을 정도다. 그것도 소규모가 대부분이다. 과학을 접목한 지역에 알맞은 스마트 영농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극한 호우와 같은 기후재해는 앞으로 더 자주 심각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예부터 농사는 천하의 근본이라고 했다. 그래서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 한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지속가능한 농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속가능한 농업은 단순히 생산량을 유지하는 것을 뛰어넘어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농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시스템으로 정착돼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정부, 지자체와 농민, 농업전문기관 등 모든 주체가 협력을 강화해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길이 만들어져야 한다.

농업은 우리의 식량, 나아가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 생산기지이자 기후 위기 속 더욱 보호받아야 할 산업의 한 분야이다. 더 급이아말로 농업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김현지, 당신은 대체 누구입니까?



아 침 헛 살

고 하 승 주필

이제껏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부랴부랴 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야반박사이다.

장관급도 아니고 차관급도 아닌 1급 비서관이 이제껏 대한민국을 뒤흔든 일이 역대 다른 정권에서 있었던가. 내 기억으로는 없다. 그래서 그에 대한 궁금증은 더욱 커지고 있다.

대체 김현지가 뭐라고 정치권이 이제껏 난리인가.

그는 철저하게 배일에 짜인 인물이다.

대통령실에서는 이른바 '만사현물'이라 불리며, 장관 후보자 사표를 직접 통보하고 대통령이 장·차관 회의에서 실명을 언급할 정도의 정권 실세로 통하지만, 정작 대다수의 국민은 그가 누구인지 모른다.

나이도, 학력도, 경력도, 고향도 알려진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혹시 남과 간첩 아니냐"라는 소리가 나오겠는가.

진짜 그의 정체는 무엇일까?

사실 국가의 중요 정보를 일상적으로 접하는 대통령실 1급 비서관이자 정권의 핵심 실세가 이토록 배일에 싸여 있어선 안 된다. 무명하게 그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물론 집권여당까지 나서서 그를 철저하게 은폐하고 있으니 걱정이다.

그는 30년 넘게 단 한 번도 빠진 적 없던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국정감사 출석 정통을 끌어 버릴 정도의 막강한 힘을 가진 실세라는 게 이번에도 드러났다.

실제로 총무비서관은 14대 국회 이후 단 한번도 증언에서 제외된 적이 없다. 총무비서관이 인사와 예산을 다 총괄하는 핵심 자리이기 때문이다.

이제껏 대통령이 갑자기 그를 총무비서관에서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겨 버렸다.

김현지는 하루아침에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며 '문고리 권력'으로 불리는 제1부속실장을 맡게 된 것이다.

김현지란 끝까지 보호한다는 걸 국민이 납득을 하겠느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여담에서도 "상식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다"라며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 (김 비서관이) 나오는 것이 국민에 대한 대의이고 국민권 정부가 지켜야 할 원칙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현지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그래서 당연히 그가 국정 증인으로 참석하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이제껏 대통령이 갑자기 그를 총무비서관에서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겨 버렸다.

김현지는 하루아침에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며 '문고리 권력'으로 불리는 제1부속실장을 맡게 된 것이다.

더구나 1부속실장은 국회 출석 전례가 없다. 따라서 그는 이제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

아담에서 이런 인사를 겨냥해 '국정감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다.

한마디로 '만사현물'이라는 김 비서관을 보호하기 위한 인사는 것이다.

물론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는 국감과 무관하다"라고 발뺌하고 있으나 그런 해명을 믿는 어리석은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대체 김현지 실장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에게 이런 기괴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자행되는 것일까?

국민의힘은 "김현지라는 최고 준엄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연쇄 이종"이라고 비판했다.

개혁당도 "김현지씨가 대통령 위의 최고 존엄, VV 일니까, 아니면 국민 앞에 드러내지 못할 엄청난 사연이라도 있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정말 그가 이제껏 정권에서 신성불가침 존재인 '최고존엄' 일까?

필자 역시 그게 궁금하다. 아마 다수의 국민도 그런 의구심을 지니고 있을 게다.

그저 묻는다. 배일에 짜인 김현지 당신은 대체 누구입니까?

신고포상제

기 고



박진우
전남 영광소방서 예방안전과장

화재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대피와 초기 화재 진압이다. 이를 위해 비상구,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발신기 등 소방시설은 언제나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여전히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스프링클러를 임의로 차단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한다.

가 발생한다.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고 예방하기 위한 제도도 바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이다. 이 제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비상구 폐쇄·훼손·장애물 적치 등 위험행위를 목격한 국민이 신고하면 이를 포상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고가 접수되어 위험행위가 확인되면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이 제공된다.

신고 대상은 불법정 다수가 이용하거나 화재 발생시 대피 통로로 변질 우려가 큰 시설들이다.

소방당국은 이 제도를 통해 안전문화 확산과 더불어 불법행위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전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일상에서 지켜야 할 작은 약속이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그 약속을 실천하는 통로가 되어 줄 것이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이 제도에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주택용 소방시설

기 고



홍승준
경기 오산소방서 화재예방과

즐거움 명절을 위협하는 불행재미 있다. 바로 화재다. 명절에는 음식 준비로 부엌 사용이 늘어나고, 장시간 외출이나 이동으로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아 화재 위험이 높아진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주택 화재는 전체 화재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며, 인명 피해 또한 가장 많이 발생한다.

생한다. 그러나 간단한 대비만으로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그 핵심이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이다.

추석 차례 음식을 준비하던 중 기름을 달구던 프라이팬에서 불꽃이 치솟았으나 주방에 비치된 소화기로 신속히 진화를 큰불로 번지는 것을 막았다. 만약 소화기가 없었더라면 가족들이 모인 명절에 자칫 큰 피해로 이어졌을 것이다.

이처럼 소화기와 감지기는 '가장 가까운 소방관'이라 불릴 만큼 중요한 생명 지킴이다. 설치 방법도 간단하다.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거실과 방마다 1개씩 설치하면 된다.

다자오는 추석, 부모님께 건강식품이나 생활용품 선물하는 것도 좋지만, 주택용 소방시설을 준비하는 것만큼 든든한 선물은 없다.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값진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시민일보 siminilbo 지방자치를 이끄는 시민의 힘

독자대표 (02)2676-2114	국무청장 (02)262-0217
편집국 대표 (02)3676-2114	FAX (02)762-8223
정기·행정부 (02)765-8115	경제·문화부 (02)262-0392
사회·수도본부 (02)262-0314	편집부 (02)262-0242
충무부 (02)262-0217	영남부 (02)262-0164
FAX (02)762-8223	
광교본부 (02)262-0164	윤천부 (02)2675-7956

www.siminilbo.co.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여의도동, 국동VP빌딩 6층) 구독료: 연간 180,000원 / 월정 15,000원 / 1부 800원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